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0.(화) 15:00 배포 2026.11.10.(화) 08:30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

- 지식재산 실거래가격 정보 공개, 인공지능 기술로 가치평가 5분 만에 -
-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연내 선정 완료 -
- 지식재산처 제48회 국무회의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 체계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된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공개되고,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5분 만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도 산출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11.10(화)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지식재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지식재산 실거래가격 공개>

10개 부처별로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새롭게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분산된 거래 실적 자료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거래소 개편 및 전담인력 확충으로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 >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고, 거래 전문관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 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확대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한다.

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술의 경우 이를 원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술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 기술이전촉진법(산업부 소관) 내 관련 규정 개정('26.5)→시행('26.11.27)

아울러, 인력 빼오기, 기술 탈취보다 제 가치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사회는 지식재산 거래의 선결조건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해외 지식재산 거래 시장 공략 본격화 >

마지막으로,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원에 달하는 국제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내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하여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는다. 이에 더하여,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연내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발표된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통제탑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거래과	책임자	과 장	강윤석 (042-481-3542)
		담당자	서기관	김현태 (042-481-86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1 배경 및 현황

○ AI 기술의 발달로 기술경쟁도 속도전, 자체 연구개발만으로는 부족 → R&D 결과물의 빠른 시장 진출, 성공 창업을 위해 **IP 거래 활성화 필요**

○ 우리나라 지식재산 거래의 양적·질적 수준은 **주요국 대비 저조**

■ 대학·공공연 기술거래 수입: (韓 전체) **2,780억원**('24) vs (美 펜실베니아대) **6,365억원**
■ 건당 거래액은 美의 7.3% 수준 : (韓) **3천만원**('24, KIAT) vs (美) **4.1억원**('24, AUTM)

○ 그러나, 최근 우수 거래사례 등장 → **IP거래 新산업화 청신호**

■ 세종대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특허' 거래를 통해 **172억원의 기술료 수입** 획득('24)
■ 국내 IP 수익화 기업 I社는 KAIST의 Wi-Fi Calling 특허를 2억원에 매입
→ 美 통신 3사로부터 **총 800억원 수익** 달성('21~'26)

2 중점 추진 과제

◈ ①구조적 모순을 찾아 **근본 체질을 바꾸고**, ②**규제를 합리화**하며, ③**국내+해외로 거래시장 확대**를 추진

1 지식재산 거래시스템 효율화

❶ 부처별 산재된 시스템*을 연계·통합, **'IP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26.下~) 중기부·지재처

* 현재 지재처,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기후부, 농진청 등 10개 부처가 각각 운영 중

❷ 파편화된 거래실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IP 실거래 가격** 제공('27~) 지재처

* ① 각 기관의 거래 실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실거래가 정보' 제공 + ② AI 가치 평가에 기반한 거래 희망 IP의 '평가금액' 제공

❸ **'지식재산거래소' 확대·재편** : 전문 중개서비스 절대 부족 문제 해소 지재처

↳ 現 발명진흥회, 특허전략개발원 등 부서별 산재 → 기능 통합하여 부설기관화('26.下~)

■ '공신력·전문성 갖춘 거래전문관' + '민간거래기관' 間 공동 거래 ⇒ 민간서비스 육성
■ 지방 대학·연구기관에 거래전문관 파견 ⇒ 제2, 제3의 세종대 사례 창출, 지역성장 발판
■ 박사급 거래전문관 확충 (('27) 36명 → ('30) 200여명 목표) ⇒ 생산적 공공일자리 창출

❹ 시장이 원하는 **‘우량 지식재산’ 공급** 확대[관계부처]

○ 응용·개발 분야 R&D 과제에 대해 **지식재산 전략 수립**[IP-R&D] **지원을 확대**(('24)3.2% → **('29)15%**)하고, 유망기술은 **해외특허 출원까지 적극 지원**('27~)

○ 대기업·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개방** 및 **중소기업 무상 기술거래 활성화***

* 참여 인센티브 확대(공급기관 경평 우대·특허수수료 감면 등), 기술거래 수요기업에 R&D·사업화지원 연계, 무상기술거래 합동 공고 등

○ **기술료 지급 방식 개선** 지원(정액기술료(선불) → 매출연동 기술료*(후불))

* 기업들은 기술 거래시 초기 기술료 부담이 적은 매출연동 기술료를 선호

2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❶ **(거래 방식)** 보편적 사용[통상실시 우선] 원칙 → **‘자율 선택’으로 전환**[산업부·지재처]

* 자율선택(통상실시 or 전용실시) 가능하도록 개선(기술이전법 '26.5 개정, '26.11 시행)

❷ **(거래 기업)** 기술이전 대상이 중소기업 위주에서 중견·대기업으로 확장됨에 따른 **세부 이전 절차 등 정비**[관계부처]

* 거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법령 폐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21)

❸ **(수출 절차)** 국가핵심기술 **특허수출 승인·신고 절차 개선** 검토[산업부·지재처]

3 국내외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확대

❶ 기술탈취보다 ‘정당한 거래가 이익이 되는 환경’ 마련 → 고비용,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보다 **행정조사**[중기부·지재처]**와 기술경찰 역할 강화**(34명 ↑, '26.6)[지재처]

❷ IP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群”**으로 육성(연내 20개 선도기업* 선정)[지재처]

* 특허 매각·라이선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기업, 벤처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

3 이행 체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중심의 **강력한 총괄·조정** 추진

○ 부처별 거래 촉진 정책을 넘어 **정부 최초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3개년]**” 수립**('27.上) **및 적극 추진**[관계부처]